

2003 지방재정 세미나

개 회 사

정 기 섭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개혁과제」 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03년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를 지방재정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선결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 정도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는 곧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민선자치 이후 그 동안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구조와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재정 총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자체수입의 감소, 채무규모의 누적, 이전재원에 대한 기대과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체도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골격이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분권형 재정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의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 형성된 지방재정의 틀을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몇 가지 임시방편적인 변화만이 시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정부가 지향하고 추진하려는 성공적인 지방분권은 권한과 사무와 재정을 가진 중앙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실현이 가능합니다. 즉, 과거의 중앙집권적 사고를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라는 국가 전체적인 틀 아래에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해야 만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권형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지방행·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수준 높은 자치경영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개혁의 기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참여와 함께 다양하고도 생생한 지방자치현장의 목소리가 개진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개최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의 정책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행자부 장관님,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학회 회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10일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정 기 섭

2003 지방재정 세미나

축 사

김 두 관

(행정자치부 장관)

존경하는 지방재정 관계자 여러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작업이 한창인 시기에 지방재정 전문가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축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재정학회 정기집 회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형환 이사장님,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김병준 위원장님과 학회 회원님, 지방의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지방재정관계자 여러분!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과거의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과 권한을 지방에 내려보내되, 지방에 재원 이양을 먼저하고 그에 맞춰 권한을 넘겨주는 전략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발전 전략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과제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참여정부에서는 『분권·자율·투명』의 국정원리에 따라 국가발전의 제도약을 위해 ‘국정운영체제의 효율성 극대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을 비롯한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발전 차원을 넘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을 전략적인 경쟁단위로 키우고자 하는 국정운영체제의 개편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경쟁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일괄하여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불건전한 재정운용 사례를 들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거나, 심지어 중앙집권과 집중운영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발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지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과 함께하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지방분권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이거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분권의 구체적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재원 중 합리적 규모를 지방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재정 부족액의 76.4%밖에 충당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양여금을 단위사업별 배정에서 자치단체별로 총액배정(lump sum)으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제도를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과 지방채 개별발행 승인제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운영체계가 성과중심의 중장기계획재정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넘겨받은 재원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시민단체, 각계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지방재정관계자 여러분!

지난 4일에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 제시된 분권철학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분권 없이 발전 없고 혁신 없이 분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앙과 지방의 혁신역량을 동시에 제고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분권형 선진국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의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되고 토론되는 내용 하나하나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김 두 관

2003 지방재정 세미나

축 사

김 병 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김병준입니다.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에는 분권과 자율의 시대를 맞이하여 오랜 중앙집권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역류시키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신뢰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선분권 후보완 원칙아래 중앙의 권한과 기능이양보다도 우선하여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지방의 재정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시대, 분권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하셨습니다. 재정분권에 있어서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이전재원 등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지방자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국가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재편하고, 국가보조금은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된 분야에 한하여 유지하고 그 이외에는 사업과 재원을 함께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교부세율의 인상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분권시대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구축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이고, 분권형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할 과제입니다만, 실천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의 공동 지혜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한국지방재정학회 정기섭 회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형환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한국지방자치 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7. 1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 병 준